

북한미사일
시험준비 2면



노벨 평화상수상자
시린에바디의 이란공격 반대 4~5면
팔레스타인 내전 위기 5면
민주노총 산별전환 투표 7면

우석균칼럼
-한미FTA 협상 비판 4면



2호 2006년 6월 24일

<http://www.alltogether.or.kr>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맞불

값 600원

하디타 학살 규탄한다 자이툰 부대 철수하라 이란 공격 반대한다

“부시가 오랜만에 활력을 되찾았다.” 최근 부시(와 공화당)의 행보 — 부시의 이라크 방문과 점령 지속 의지 천명,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거부, 공화당이 주도한 철군안 부결(상원)과 이라크 점령 지지 결의안 통과(하원), 바그다드와 라마디에서의 공세 등 — 를 두고 주류 언론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공세적 행보에 발판이 된 것은 자르카위의 죽음이다.

자르카위

자르카위 사망 직전까지 부시는 그야말로 죽을 쑤고 있었다. 하디타 학살이 폭로됐고, 관타나모 수용소에서는 3명의 재소자가 자살했다. 미군 사망자 수는 2천5백명에 육박했다. 지지율은 30퍼센트 아래로 떨어졌고, 11월 중간선거 승리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듯했다.

당연히 자르카위 사망 소식은 부시에게 가뭄에 내린 단비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어쩌다 한 번 단비가 왔다 해서 가뭄이 끝나는 건 아니다.

사실 부시 자신도 이 점을 알고 있다. 자르카위 사망 직후 그는 “저항과 테러는 계속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부시 처지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자르카위의 죽음을 이용

팔루자 — 점령이 계속되는 한 이러한 야만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것은 당연하다. 화당 하원 원내대표 존 A 뵤너 — 는 바로 그러한 시도의 일환이었다.
지난 15일과 16일 공화당이 의회에서 펼친 공세 —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공 그러나 공화당이 의회에서 거둔 성과는

그리 대단한 일도, 놀랄 일도 아니다. 민주당의 약점 — 전쟁과 점령 자체가 아니라 그 수행 방식의 ‘효율성’을 문제삼는 것 — 을 고려할 때 공화당의 ‘승리’는 당연한 결과였다. 애초 그것은 ‘논쟁 아닌 논쟁’이었다.

반면, 부시와 공화당이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라크 정책 지지를 설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자르카위 사망으로 부시의 지지율이 크게 반등할 것 — 비록 곧 다시 떨어진다 해도 — 이라는 대다수 언론의 예상과는 달리 부시의 지지율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뉴스의 합동 여론조사에 참가한 미국인의 54퍼센트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군의 1년 내 철수를 주장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대중은 이라크 문제에 관해 확고부동한 결론에 도달했다. ‘군대를 돌아오게 할 방법을 찾자’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워싱턴포스트> 6월 17일자)

☞ 4면 하단으로 이어짐

6·24 반전행동

일시: 6월 24일(토) 오후 3시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집회 후 광화문으로 행진)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인용해도 될까요?

“의원님의 차기 총선은 확실하게 제가 책임지고 치를 것입니다. 향후 4년간 의원님 사무실 운영은 재정 포함 전부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의원님께 주1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향후 어떤 경우도 의원님 허락 없이 조직화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 한나라당 의원 박승환의 동생이 부산 구청장 공천희망자에게 담보금 10억 원과 함께 요구한 충성서약서

〈독립신문〉주필 정창인: “오세훈은 친북좌파 세력이 한나라당에 심은 트로이의 목마”

미래포럼 대표 서석구: “오세훈을 공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이명박 시장의 정체성에도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오세훈의 최열 기용에 흥분한 우익들

“친(親)기업 정책으로 180도 전환해야 한다. ... 친북 · 반미 · 언론보 · 사학법은 진보 · 개혁이 아니다.”

—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오세세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 놈[전교조]들은 질이 아주 나쁘다. ... 노조는 막말로 빨갱이다. 필요한 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첩자가 필요하다. ... 제가 전교조 위원장을 구속시킨 적이 있다. 구속시키려면 작전이 필요하다.”

— 한양대 초빙교수 이재민

“[박근혜] 대표님께서서는 대선 불법자금과 탄핵 역풍 속에서 바람 앞의 촛불과 같았던 한나라당을 기사회생시켰습니다. 17대 총선 직전 ... 흠먼지 날리는 허허벌판에 천막을 치고 새 출발을 하셨습니다.”

— 한나라당 사무총장 허태열의 ‘박비어천가’

북한 미사일 시험 준비는 미국 대북제재의 귀결

요즘 날마다 언론은 북한이 대포동2호(또는 개량형)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시험 발사를 할 것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도밖에 없을 것이다. 그로서도 손익계산서를 내기가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명백한 하나의 가능성이 돼 있다. 앞뒤가 꺾꺾막혀 있는 북미관계를 그냥 두고 버티느니 차라리 미사일 발사로 모종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또는 준비)는 그 자체로 북미관계의 현 주소를 보여 주는 상징이다.

지금 미국은 북한에게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만큼 적반하장도 없다. 9·19 성명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금융제재 등으로 북한의 목을 조르면서 6자회담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은 바로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제적 반자금세탁 활동에 협력할 용의를 표명하며 양보 의사를 보였을 때도 미국은 대화를 수용하지 않았고, 지난 1월에는 북한의 크리스토퍼 힐 초대에도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시 정부의 이런 초강경책이 모종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부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끌고 있다. 부시는 이라크와 이란 문제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태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로 부시 정부의 이런 약점을 파고들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부시의 강경책으로도 북한의 ‘위협’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제 바통을 협상파들이 이어받을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하면서 말이다. 마치 핵보유 선언 이후에 그런 분위기가 잠시 형성됐듯이 말이다.

하지만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해도 난항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6자회담과 관계없이 대북 제재를 계속할 것임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 설사 어떤 합의가 도출된다 해도 그것이 합의 파기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알게 무엇인가.

지난해 9·19 성명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높게 평가했던 사람들은 1년도 안된 오늘날 왜 미사일 시험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됐는지 설명해야 한다.

MD체제의 명분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북미 또는 북일 간의 약속 위반이라며 거품을 물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길을 터준 것은 미국 자신이다.

1998년 대포동 미사일 시험 이후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도 있었다. 미사일 협상이 시작된 이후,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5백 킬로미터 이상의 사정거리를 갖는 모든 미사일의 개발과 시험을 동결하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은 클린턴이 방북하면 모든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클린턴은 북한에 가지 않았다. 전 미국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자신

의 회고록 《매들린 올브라이트(마담 세크러터리)》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의회와 전문가 그룹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하는 거래가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구축의 명분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 반대했다.”

MD 구축의 명분을 위해 북한의 미사일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본토가 미사일이 아니라 여객기로 공격당하면서 MD에 돈을 쏟아붓는 일이 무색해졌지만, 부시 정부는 2002년 북핵 파문을 이용해 MD를 구축하고 동맹국의 참여를 촉구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지난달부터 흘러나온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설 자체가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미군기지에 MD체제의 핵심인 PAC-3를 연내 배치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선언을 했던 북한은 지난해 3월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조·미 간의 대화가 전면 차단됨에 따라 미사일 발사 보류에서도 현재 그 어떤 구속도 받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일을 MD체제 시험 기회로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시스함에서 발사되는 스탠다드미사일3(SM-3) 개발과 시험을 이미 마쳤고, 2003년부터는 남한에도 패트리어트 최신형인 PAC-3를 배치해 왔다. 딱 한 가지 미국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실패했을 때의 망신살뿐이다.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는 이유는 핵무기 때문도, 미사일 때문도 아니다. 미국은 친구에게는 핵과 미사일 기술을 아낌없이 제공해 왔다.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세계 전략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지역 강국의 등장을 막는 것인 한, 또 동아시아에서는 그것이 중국이라고 내놓고 말할 처지도 아직 아닌 한, 미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명분과 속죄양은 필요한 법이다.

김하영

김진경은 ‘전교조의 초심’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전교조 초기 상근간부이자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진경이 “지금의 전교조는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만 되는 세력”이라며 전교조를 비판했다. 그는 “초기 전교조 교사들의 주된 관심은 ‘학생 교육’”이었다면서 ‘전교조의 초심’ 운운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진경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도입하는 노무현 정부를 옹호하고 있다. 그는 전교조가 ‘방과 후 학교’나 자립형 사립고, 국제중학교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등록금이 수천만 원인 자립형 학교 도입에 반대하고, 평준화 강화를 주장하는 전교

조의 정책이 어찌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또, ‘방과 후 학교’는 학교가 끝난 후 학생들을 계속 입시 교육에 매달리게 만드는 정책이다. 진정 학생들을 위한다면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입시경쟁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우파 언론들은 김진경의 말을 빌어 전교조를 비난하는 데 열을 올렸다.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전교조를 질타하는 <조선일보>의 모습은 역겨울 따름이다.

자유주의적인 <한겨레>조차 “전교조가 조합원인 교사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김진경의 말을 인용하며 전교조가 교장공모제

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교원평가, 방과 후 학교, 차등성과급제에 반대하는 것도 교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인 양 매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는 교장 선출이라는 개혁적 외양을 띠고 있지만, 사실 학교를 기업처럼 운영하는 CEO형 교장을 도입해 학교간·교사간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이것은 학생들 사이의 경쟁 강화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전교조가 교장공모제, 교원평가, 방과 후 학교, 차등성과급제에 반대하며 최근 ‘4대 교육현안 해결 집중투쟁’에 돌입하기로 한 것은 학생들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므로 완전히 정당하다.

그런데 전교조가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일부에게서도 “교사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비판은 전교조가 투쟁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두발단속·체벌·입시경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행동이나 다른 교직원들과 비정규직 교사 등의 권리,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권리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적극 맞설 뿐 아니라, 학생들이나 비정규직 교사 등 다른 교직원들의 투쟁에도 실질적·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이 전교조의 초심을 지키는 진정한 방법일 것이다.

강동훈

논쟁

5 · 31지방선거 이후 민주노동당의 진로

지방선거 이후 민주노동당 내 첫 논쟁은 또다시 “대중정당”이나 “계급정당”이냐를 놓고 시작됐다. 이용대 정책위의장은 “대중들에게 당의 이미지가 계급정당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좀더 광범위한 계층에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정당”론 — 정확히 말하면 “국민정당”론 — 은 선거가 끝나기만 하면 어김없이 제기됐다. 이 주장은 민주노동당이 선거 정당으로서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범위를 넘어 훨씬 더 광범한 사람들 —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인” — 에게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민주노동당이 아직 노동계급 속에서도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조직 노동자들의 지지가 당 초기에 비해 늘어나긴 했어도 여전히 전체 조합원 중 5퍼센트만이 당에 가입해 있다.

이처럼 미조직 노동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활적인 과제가 있으나, 당 기획조정실이 인정하듯이 민주노동당은 “비정규법안의 강행 통과를 저지한 것 외에 특별한 사업이나 성과를 마련하지 못하였다.”(‘2006지방선거 평가 토론회 초안’)

따라서 노동계급을 넘어 “좀더 광범위한 계층에 호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의 외연을 중간계급으로 넓히려다 노동계급에 내린 뿌리마저 알아지는 실수를 저지를 공산이 크다.

민주노동당이 노동계급의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중의 전투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중정당”론이 뜻하는 바는, “‘장외투쟁’을 삼가고 의회 내에서 협상과 타협을 통해 자본가 정당들과 ‘상생’하는 것이다. 이른바 국민적 “상식”을 당 활동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의회 협상과 전술이 점점 중요시될 것이다.”(김하영, 《단일전선체의 정치학》, 다함께, 56~57쪽.)

당 기획조정실이 제출한 ‘2006지방선거 평가’는 이 우려되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 당의 “운동권 단체 이미지”가 “지지층을 확산하고 득표력을 높이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하였다. … 대중의 상식에 맞지 않는 제도와 활동 방식을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한다.

〈진보정치〉와 〈민중의 소리〉는 서

울 · 울산 같은 지역에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국회의원을 공천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민중의 소리〉는 이를 위해 “선거를 지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도부가 … 공천에 개입”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국회의원이 나왔더라면 김종철 후보나 노옥희 후보보다 더 많이 득표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개인 프로필보다 정당 투표 양상이 더 두드러진 요즘 선거의 근본적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점은, 득표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냐는 점이다. 김종철 후보 개인은 현직 국회의원 누구에도 못지 않은 훌륭한 선전가 · 이론가이다. 게다가 다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보다 더 좌파적인 공약과 메시지를 전달했다. 물론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것은 사소한 것이었고, 게다가 좌파적 입장에서 봤을 때 느낀 아쉬움이다.

〈진보정치〉와 〈민중의 소리〉는 보수적으로 기존 사회의 가치관과 덕망성에 바탕해 후보의 적절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집권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의 정책과 주장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비판적인 인상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대중이 “불안해 한다”는 것이다(당 기획조정실).

현실 가능한 대안?

물론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사회공성 강화 — 교육 · 의료 · 주거 등 — 는 지금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근시안적인 의미에서 현실주의적으로 이 주장을 거두고 “대중들이 실현 가능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 비전” 제시로 후퇴해야 하는가.

“실현 가능”한 대안이 주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를 뜻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경제 위기의 시기에 기성체제의 이익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고서 어떻게 개혁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당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드는 1백조 원(매년)은 자본가의 이익을 희생시켜야만 마련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런 후퇴는 민주노동당과 열

민주노동당은 먼저 노동계급 속에 진정한 뿌리를 내려야 한다

우당의 차이를 “한강”이 아니라 “실개천”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열우당과 거의 다르지 않다면,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열우당보다 더 멀리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열망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민주노동당이 독자 정당으로 존재해야 할 까닭이 없다.

“현실적인 대안”은 그 옹호자들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이 “산업 정책과 경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분배만이 아니라 성장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 파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야기한 적이 없다.”(김성진 최고위원) “선거 전술을 봐도 성장 대책 구도에서 절대 복지 쪽으로 표가 안 온다.”(심상정 의원)

그러나 자본주의 하의 “성장”은 노동자의 희생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성장”의 과실이 자동으로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오직 대중 투쟁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칫 분배를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거품 물고 반대하는 우파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김인식



아노아르(이주노조 위원장)
맞불 창간 축하메시지

우선 1주일마다 새롭게 소식을 전하는 신문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더욱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한국 땅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에서 한 번 좌절하고, 사회적 분위기에

투쟁을 전달하는 <맞불>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한 번 좌절하고,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얻어내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숨어만 있어서는 안되고, 스스로 나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주노동자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에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맞불>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욱 더 많은 이주노동자 투쟁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서 <맞불>이 우뚝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더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우석균 칼럼

메스를 들이대며

의사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기업 세계화 반대 운동가

한미FTA에 대한 ‘세이렌의 노래’에 맞붙을

6월 초 1차 한미FTA 본협상이 끝났다. 미국 협상단은 1차 협상에서 이처럼 많은 진전을 이루어낸 적이 없다며 큰 만족을 표시했고 한 국협상단도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자평했다. 단 한번의 협상으로 17개 분야 중 13개 분야의 통합협정문이 작성됐더니 ‘협상’이라기보다는 합의의 위한 요식행위를 거쳤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철저한 비밀협상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만 살펴 보자.

한미FTA의 핵심 사안 중 하나는 “투자” 조항이다. 한국 협상단은 “투자 분야에는 대체로 의견이 접근”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말 미국이 콜롬비아나 페루와 체결한 미-안데안 FTA의 투자 조항이 대체적인 내용을 짐작케 해준다. 미-안데안FTA는 내국인대우와 최혜국대우는 물론이고 미국이 투자한 기업은 원래 국내기업에 부과되는 고용의무나 노동조건 보장, 환경 규제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 기업의 시장 지분과 예상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침해도 ‘간접적인’ 기업 물수로 간주된다. 공기업에 의한 독점도 투자와 공정 경쟁의 장애로 간주된다. 이렇게 기업이 공적 제나 공기업의 ‘독점’에 의해 영업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면 기업은 상대방 국가를 제소할 수 있다.

투자 조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 보자. 택배서비스로 잘 알려진 UPS가 캐나다 우체국이 소포배달을 하는 것은 정부 보조를 받는 행위라고 국제중재심판소에 캐나다 정부를 제소했다. 이 중재심판에서 캐나다 정부가 지면 캐나다 우체국은 소포배달을 중단해야 할 판이다.

이러한데 한국 정부가 양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 하면 암 보험을 파는 AIG가 영업이익을 침해당한다고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투자’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미국의 기업이 아니라 미국이 투자한 모든 ‘주식’이다. 국내 기업 중 미국 투자지분이 없는 기업이 있는가? 한미FTA는 한미 양국 기업 모두에게 환경 규제 등의 공공적 규제와 노동자의 권리보장 조항 등을 한꺼번에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다.

공기업의 독점?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도입권을 독점하지 않게 되면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 당연히 GS칼텍스의 GS와 세브란테스코(칼텍스의 모기업) 그리고 SK와 SK의 지주회사인 SK에너지의 50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언론이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미 가스 직도입권을 GS칼텍스와 SK에 허용해 주었다.

자본에 대한 공공적 규제가 풀리고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가스값이나 수도·전기 값이 폭등하는데 GDP가 올라가고 평균소득이 3만 달

러가 되면 어쨌든 평범한 노동자들에게는 재앙일 뿐이다.

한미FTA의 또 하나 중요 분야인 서비스분야를 보자. 정부는 이번에 미국이 ‘교육과 의료분야의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서비스개방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교육과 의료는 예외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WTO처럼 개방 대상을 열거하는 것(포지티브시스템)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는 것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미래에 나올 상품까지 모두 개방한다는 포괄주의(네거티브시스템) 체계다. 결국 정부의 말은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교육·의료 개방만 안 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할 것이라는 이야기일 뿐이다. 게다가 교육과 의료 영리법인은 이미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 알아서 시행했다.

재앙

정부가 개방이 없다고 주장하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만 살펴보자. 우리 나라 건강보험제정 중 30퍼센트는 약값으로 나간다. 한미FTA가 되면 약값은 어떻게 될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특허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받아들인 페루의 경우 페루 보건성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미-안데안FTA 효과로 1년 뒤 약값이 9.6퍼센트, 10년 뒤 1백 퍼센트 오르고 매년 70만~90만 명이 필요한 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를 한국에 적용해 보면 한미FTA 후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추가로 쥐야 할 약값만 1년 뒤 8천억 원이고 10년 뒤에는 8조 원이다. FTA가 체결되면 당장 1년 뒤 한 집안당 6만 5천 원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더 쥐야 하고 약을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도 의료는 개방이 없고 공공성 훼손이 없다고?

여기에서 최근 미국의 정경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특별소비세 폐지, 보험료 규제 철폐, 식품안전검사 폐지, 모든 제도 도입시 기업외견 관철 등을 한미FTA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한미FTA가 진정한 자유화로 나아가려면 최근까지 미국이 맺은 모든 FTA를 뛰어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적 NGO인 옥스팜은 미-안데안FTA에 대한 보고서 제목을 “세이렌의 노래”라고 붙였다. 매혹적이지만 그 노래에 홀려 따라가면 결국 괴물에 잡아먹히게 되는 세이렌의 노래. 정부가 하고 있는 한미FTA 선전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아르고호의 오르페우스가 했던 것처럼 정부의 ‘세이렌의 노래’에 또 다른 노래로 ‘맞붙’을 놓는 일이다. 우리가 부를 노래의 제목은 이렇다. 자본의 이윤만을 위한 FTA를 중단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위한 맞붙을 놓자!

미국의 이란 폭격은 민주화 운동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 글은 이란의 인권 신장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온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시란 에바디**가 영국 런던에서 한 강연을 요약한 것이다.



전쟁을 통해서 이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총선과 대선은 사람들이 이

란 정부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란의 유권자는 4천9백만 명이지만, 대선 결선투표 당시 아흐마디네자드를 찍은 사람들은 1천4백만 명 뿐이었습니다.

1997년 대선에서 모하마드 하타미가 당선됐을 때, 2천2백만 명이 그를 찍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란 불만의 첫째 원인은 경제적인 것입니다. 이란 전체 인구 7천만 명 가운데 1천만 명이 절대빈곤선(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빈곤은 잘못된 경제 정책들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더 발전된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이란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후보에게 투표할 자유가 없습니다. 이란의 혁명수호위원회가 후보의 적합성을 먼저 판단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첫 단계는 자유선택과 자유선거입니다. 지난 28년 동안 이란 국민들은 혁명, 이라크와의 8년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폭력에 지쳤습니다. 그들은 개혁을 바랍니다. 개혁 운동은 진정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란

에 대한 군사 침략이나 폭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란이 공격당하면, 이란인들은 민주주의의 확대를 바라는 염원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침략을 당하면 정부는 자유와 자유를 위해 싸울 온 사람들을 억압할 것입니다.

서방, 특히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면 중동의 안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들은 이란이 민주주의가 아니며, 만약 근본주의자들이 핵무기를 획득하면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미국의 의도가 진실한 것이라면, 저는 미국에게 중동 지역에 이미 핵 위협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무사라프 대통령은 민주적 방식을 통해 집권하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파키스탄의 차이는 파키스탄이 미국의 우방인 데 반해, 이란은

미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바다

이런 이중잣대 때문에 세계인들은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이라크를 침략하면서 미국은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독재자가 후세인 밖에 없을까요? 불행히도 세상은 독재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석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

죠. 후세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핵무기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핵무기가 필요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국은 군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오히려 국민을 위한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란은 평화적으로 핵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세계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세계가 이란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이란에 더 진보적인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첫 단계로 혁명수호위원회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법을 폐기해서 이란인들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방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란이 또 다른 이라크가 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마스 대변인도 문서의 90퍼센트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PA 출범 이후 유명무실해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 파타당이 지배하는 — 를 팔레스타인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대표 기구로 인정하라는 요구와 국제적 결정들의 승인에 관한 조항들에 이견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문서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위험이 있고, 압바스는 그 문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압바스는 미국이 추진한 이른바 ‘중동 평화 로드맵’ 덕분에 PA 수반이 될 수 있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

설을 약속했던 ‘중동 평화 로드맵’은 이스라엘의 사실상 보이콧 때문에 이미 오래 전에 파탄났다. 그럼에도 압바스는 이스라엘과의 대화에 집착하며 자신이 모든 협상을 주도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재소자들의 문서’를 이용해 하마스를 PA에서 몰아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뒤늦게 깨달은 하마스 와 이슬람지하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서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내전 위기는 점령과 억압이 낳은 또 다른 비극

6월 10일 하마스와 이슬람지하드 지지자들의 국민투표 반대 시위

최근 팔레스타인의 파타당 지도자 자치정부(PA) 수반인 마흐무드 압바스 지지자들과 1월 총선에서 의회 다수파가 된 하마스 지지자들 사이에 무장 충돌이 빈발하는 등 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 충돌은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했다. 압바스는 이스라엘 감옥에 갇힌 팔레스타인 재소자들이 쓴 ‘팔레스타인의 국민적 합의 문서’를 다음 달에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그 문서는 이스라엘의 점령 종식, 그 때까지 저항의 지속, 1967년 이전의 영토 분할선을 국경선으로 하고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귀환권 등 그동안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18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파타당 팔레스타인인들의 다수가 그 문서를 지지하는 것이 놀라운 일만은 아니다.

또, 그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 중에는 마르완 바르구티 같은 파타당 지도자뿐 아니라 하마스, 이슬람지하드, 팔레스타인해방민전선(PFLP), 팔레스타인해방민주전선(DFLP), 알 아크사 순교자 여단 등 주요 정치·군사 조직의 지도자들도 포함돼 있다.

하마스 대변인도 문서의 90퍼센트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PA 출범 이후 유명무실해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 파타당이 지배하는 — 를 팔레스타인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대표 기구로 인정하라는 요구와 국제적 결정들의 승인에 관한 조항들에 이견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문서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위험이 있고, 압바스는 그 문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압바스는 미국이 추진한 이른바 ‘중동 평화 로드맵’ 덕분에 PA 수반이 될 수 있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

설을 약속했던 ‘중동 평화 로드맵’은 이스라엘의 사실상 보이콧 때문에 이미 오래 전에 파탄났다. 그럼에도 압바스는 이스라엘과의 대화에 집착하며 자신이 모든 협상을 주도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재소자들의 문서’를 이용해 하마스를 PA에서 몰아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뒤늦게 깨달은 하마스 와 이슬람지하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서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아사 작전”을 통해 팔레스타인인들을 굶주림과 절망에 빠뜨려 그들이 하마스를 포기하고 압바스를 유일한 대안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 했다.

이스라엘은 합정을 파놓았고, 압바스는 ‘재소자들의 문서’를 미끼로 이용하고 있다.

“아사 작전”

한편, 이스라엘 총리 에후드 올메르트는 ‘재소자들의 문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의 ‘철군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국경선을 일방적으로 확정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전 총리 아리엘 샤론의 전략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샤론은 지난해 9월 가자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는 한편 요르단강 서안지방의 정착촌을 확대하고 분리 장벽 건설을 강행했다. 즉, 쓸모없는 작은 땅을 내주고 비옥하고 중요한 땅을 더 많이 차지하겠다는 속셈이었다.

물론 가자지구에서 철수한 뒤에도 인구 밀집 지역인 난민촌에 한 달에 2천 발의 포탄을 퍼붓는 등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일깨우는 일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 1월 총선에서 하마스가 승리하자, 올메르트는 팔레스타인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아사 작전”을 통해 팔레스타인인들을 굶주림과 절망에 빠뜨려 그들이 하마스를 포기하고 압바스를 유일한 대안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 했다.

이스라엘은 합정을 파놓았고, 압바스는 ‘재소자들의 문서’를 미끼로 이용하고 있다.

이수현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비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letter@counterfire.or.kr

직장, 학교, 지역사회의 투쟁 소식과 사진들을 보내 주십시오. 다음 호 기사 마감은 6월 24일(토)입니다.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파업

폭력 탄압도 꺾을 수 없는 투쟁

“박근혜 바람”의 진원지, 한나라당의 ‘뒷밭’인 대구에서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세게 소용돌이치고 있다. 2천여 명의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들은 보름 넘게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 시내 아파트 공사 현장의 95퍼센트가 벽돌 한장 올리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 파업의 효과 — 고용주들의 피해 — 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노무현 정부는 파업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몰아 몰아뜰기에

여념이 없다.

대구 검찰은 노조가 전문건설업체들과 단체협상을 한 것 자체가 “공갈·협박”이고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 받은 “노조전임비”가 “갈취”라며 장지백 전 위원장과 황용하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경찰은 대구 시내 1백5곳에 낸 노조의 집회 신고 가운데 한적한 공원 5곳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집회 불허” 통지를 했다.

경찰은 지난 6월 12일 구속자 석방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

어윤대 총장의 치부가 드러나다

최근 고려대 교지 <고대문화>에 사학과 이상신 교수가 지난 3월 어윤대 총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가 실렸다. 공개질의서에 따르면 이번 출교 결정을 주도한 어윤대 총장과 김균 교무처장은 그 동안 학교 관료로 재직하며 ‘교수 인사 비리’를 저질러 왔고 자신과 코드가 맞는 교수들의 논문 표절을 묵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 등록금으로 초호화 특급 호텔에서 교수회의를 해 왔다. 삼성 X-파일의 주범인 이학수에게 교수연

찬회를 준비해 달라고 하는 등 대기업에 굶신거리는 어윤대 총장의 ‘경영철학’도 한 번 더 드러났다. 고려대 징계자위원회는 비리를 저지른 학교 실세들이 학생들을 출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드컵 열풍에 시험까지 거의 끝난 때라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이 매우 적는데도 징계자위원회의 주장은 많은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징계자위원회는 앞으로 학교 당국의 비리와 잘못된 교육관에 항의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을 요구하며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분말소화기를 뿌려대고 곤봉과 방패로 닥치는 대로 내리쳐 3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나이 든 조합원 4명은 귀가 떨어져 나가거나 광대뼈가 함몰되는 증상을 입었다. 경찰은 폭력 진압을 견디다 못해 가로수 버팀목을 들고 저항한 조합원 7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전국 각지에서 대구로 전경들을 집결시키고 있고 15일에는 조기현 위원장 등 5명의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대구본부를 침탈하려 했다.

노동자 시인 ‘조선남’으로 더 잘 알려진 조기현 위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이 투쟁은 대구 지역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국의 건설노동자와 건설자본 간의 대리전이다. 조합원들은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말한다. 조합원들은 평균 연령이 46.7세이고 부양가족은 3.7명이다. 월 수입은 1백58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노무현 정권은 건설 자본과 손잡고 비정규직 중의 비정규직인 우리 노조의 파업을 깨기 위해 혈안이다. 하지만 전국의 건설 노동자들이 이 투쟁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탄압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 투쟁은 전국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청하

또, 징계자위원회는 방학 기간 농성장 사수를 위한 활동도 준비하고 있다. 방학 기간 천막을 지키는 학생들이 적을 때, 학교 당국과 우파 학생들이 천막을 공격할 수 있다. 특히 상당수 학생들이 농활을 떠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학생들이 폭로한 학교 비리가 더욱 불거진다면 학교 당국은 정점을 흐리기 위해서라도 천막 강제철거를 시도할 수 있다.

그래서 출교자들은 그 동안 출교철회 투쟁을 지지했던 학생들에게 방학 기간과 농활 기간에 천막을 사수해야 한다고 적극 호소하고 있다.

강영만

캠코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의 진실

자산관리공사(캠코)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통합은 <한겨레> 보도가 시사하는 바와 달리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를 통한 비정규직과의 연대가 결코 아니다.

아마 지난 2년간 정규직 임금 인상이 다소 낮았다는 점을 들어 <한겨레>는 “양보”라고 표현한 듯하다. 이것은 정부의 공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 탓이 크다. 더구나 캠코가 고임금 작업장이어서 인상은 물론 낮았지만 인상액은 낮지 않았다.

<한겨레>는 정규직의 양보를 통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같은 하향평준화를 암시했는데, 캠코 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정규직의 두 배 이상으로 함으로써 격차를 줄였다. 이것은 상향평준화였다.

캠코 정규직노조는 수년 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정규직과 동등한 성과금 지급과 복지제도 적용 등)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2003년에는 정규직만 가입 대상인 지부 규약을 변경했고, 5급 이하 3백7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했다. 이후 3~4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때문에 민주노총 소속의 독자 노조를 결성했지만 정규직 노조는 노조 규약에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역점 사업으로 한다는 조항을 명

시하고 비정규직 노조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했다. 그 결과, 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정규직노조 임명배 위원장은 <판같이>와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동지들에 대한 사용자의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방지하고 있을 때 정규직 내부에서도 성과연동제의 확대나 조기퇴직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했다.

통합노조의 상급단체가 최근 우경화 행보를 보이는 한국노총이라는 점이 못내 아쉽지만, 이번 통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진정한 연대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김문성

산별노조 전환과 현장조합원 중심

민주노총은 6월 19일부터 30일까지를 산별노조 전환 총투표 기간으로 정했다. 주로 금속연맹 소속의 현대차·기아차·대우조선 등 대기업 노조들에서 총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각 기업에서 조합원 3분의 2가 찬성할 때 산별 전환이 가결된다.

산별노조가 조직 형태상 더 큰 범위로 노동자들을 조직한다는 점에서 산별 전환 투표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 나타나는 협소한 부문주의는 산별 전환의 걸림돌이다. 예컨대 기아차에서 실리주의를 내세운 친사용자 성향의 현장조직 ‘조합원과함께’는 산별 전환 시기상조론을 편다. ‘지금도 충분히 조직력이 있는데 굳이 부품업체·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한 조직으로 묶여야 될까’ 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후진적 정서에 기대는 것이다.

물론 산별노조를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산별노조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자들은 ‘산별노조가 되면 기업별 울타리를 뛰어넘어 계급적 연대가 가능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동안 산별로 전환한 노조들 중에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대중을 조직하고 대표하는 활동을 제대로 전개했던 노조들이 거의 없었다.”(임영일, 〈연대와 실천〉 133호) 그래서 “무늬만 산별”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산별 전환 이후에도 같은 금속산별노조 아래 완성차 4사만의 자동차업종 본부를 따로 꾸리거나 정규직 지부와 비정규직 지회를 따로 조직하려는 움직임도 우려스럽다.

산별노조의 강력한 옹호자들 중 적잖은 사람들이 이런 조직 형식주의 사고를 하고 있다.

연대파업

한편, 산별노조가 모든 권한과 자원을 상층 지도부에 집중시켜 노조의 관료화와 기업별 현장 활동의 침체(현장 공동화)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왼쪽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04년에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현장조합원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10장 2조’를 합의하고 서울대병원지부의 파업을 가로막았다. 미국자동차연맹(UAW)은 산별 지도부의 승인 없이는 지부 파업을 못하게 돼 있다.

이처럼 권한이 집중된 상층 지도부와의 협상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일부 사용자들은 산별노조를 지지하기도 한다.

경총 부회장 김영배는 “노조 지도부가 윤신의 폭을 넓혀 확실한 리더십을 갖는 것이 [좋다]”며 “개별 기업에서 노사가 싸우는 것보다 산별 차원에서 정리해주면 … 협력적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매일노동뉴스〉 2005년 8월 18일치)

그러나 산별노조에서 노동운동이 어떻게 나아가느냐는 조직 형식 자체가 아니라 계급 세력 균형과 현장노동자들의 투쟁에 달려있다.

활동가들은 산별 전환을 원칙상 지지하면서도 계급적 연대와 투쟁이라는 내용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산별노조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아래로부터 현장조합원들의 통제와 투쟁,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전지운

1936년 GM플린트 파업 — 미국의 산별노조 CIO는 이러한 투쟁과 파업의 물결 속에서 건설됐다

2004년 서울대병원 파업 때 일부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이 보인 “왜 우리 안의 문제를 밖에서 간섭하고 비판하냐”던 태도는 산업별 울타리에 갇힌 모습이었다. 노사관계로드맵은 같은 산별

노조 조합원이라도 타사업장 출입을 금지해 연대를 제한하려 한다.

이처럼 조직 형태를 산별노조로 바꾸는 것이 자동으로 계급적 단결과 연대라는 내용을 채워주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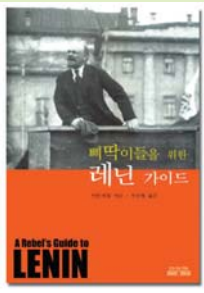
소책자

삐딱이들을 위한 맑스 가이드



마이크 곤살레스 지음
이수현 옮김
2,000원

삐딱이들을 위한 레닌 가이드



이안 버철 지음
이수현 옮김
2,000원

지역 사회포럼

한미FTA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연사 : 이유진(녹색연합활동가),
이정구(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정책기획팀활동가)

동부지역 사회 포럼

7월 4일(화) 저녁 7시 30분
동부여성플라자 3층 회의실(건대입구
역 6번 출구)
참가비 : 2천 원
문의 : 019-9731-7299

서부지역 사회 포럼

6월 27일(화) 저녁 7시 45분
이한열기념관(신촌 역 7번 출구)
참가비 : 2천 원
문의 : 011-9997-9084

대학 맑스주의 포럼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최일봉(‘다함께’ 국제연락간사)
6월 22일(목) 오후 5시
이화여대 포스코관 151호

한국전쟁,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나

한규한(주간 〈맛볼〉 기자)
6월 21일(수) 오후 5시
한양대 자연대 B114호

한미FTA가 망가뜨릴 우리의 삶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한겨레〉 칼럼니스트)
6월 21일(수) 오후 6시 30분
고려대 정경대 507호

참가비: 1천 원(티켓을 한번 구입하
시면 6월에 열리는 모든 모임에 참
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atgstudent@hanmail.net
010-2752-2003

정기 구독하십시오



짚 6개월 / 2만 원
(신문값 15,500원 + 우송료 4,500원)

짚 1년 / 4만 원
(신문값 31,000원 + 우송료 9,000원)

계좌 번호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인터넷에서도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alltogether.or.kr>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학살 도우미 자이툰은 철수하라

자이툰 부대는 사실상 미군의 학살을 돕고 있다. 자이툰 부대의 주둔 자체가 미국의 점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 구실을 하고 있다.

자이툰 부대는 군사적으로도 학살을 돕고 있다. 자이툰 부대가 직접 학살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이라크 북부를 맡으며 미군의 작전 범위를 넓혀주고 있다. 다국적군의 철군 러쉬 때문에 자이툰 부대에게 더 위험한 임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탈리아가 최근 철군을 시작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조차 철군 계획을 내놔야 하는 매우 심각한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열우당 정부는 완전한 철군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다. 고작 1천 명 감군하는 선에서 비판과 비난을 무마하려 한다.

전략적 유연성

올해 초에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이라크 전쟁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 2004년 6월 주한미군 2사단 병력 3천6백 명이 이라크로 차출됐다. 앞으로 이라크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외 곳곳에 퍼져 있는 미군을 집중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한국 정부가 매우 실질적인 일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한국 정부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같은 전쟁 지역에 직접 한국군을 파병해 부시를 지원하고 있다.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한 술 더 떠 상설파병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상설파병부대는 “신속대응군”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는 운동은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이 이라크 점령과 자이툰 철군 문

자이툰 부대를 방문한 린스펠드

제를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협소한 시각이다. 게다가 이라크 점령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같은 중장기적 문제가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전투다. 따라서 점령과 파병에 반대하는 운동은 여전히 한국 반전 운동의 매우 중요한 과제다.

김광일

관타나모 수용소는 지상의 지옥

얼마 전 쿠바의 관타나모 만에 있는 미군 기지 수용소에서 재소자 세 명이 자살했다. 미국은 재소자들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붙잡힌 ‘적 전투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더라도 2004년 당시 재소자 5백여명 가운데 테러 단체의 ‘전사’로 분류된 사람은 8퍼센트뿐이었다. 또, 지금까지 정식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사람은 단 10명뿐이었다.

현재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4백60여 명의 재소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 중에는 체포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사람들도 여럿 있다. 심지어 14세 때 체포된 사람도 있다. 이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많은 재소자들이 여전히 변호사 접견권을 거부당하고 있다. 이번에 자살한 세 사람도 변호사가 없었다.

미국은 재소자들의 자살 또는 자살 기도가 절망에서 비롯한 행동이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한 “비대칭 전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풀려난 영국인 사피크 라술은 이렇게 말했다. “관타나모에는 희망이 없다. 날마다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재판을 받든지 아니면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사실, 미군이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에서 자행한 고문과 학대 등 온갖 잔인한 인권 유린 행위로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먼저 시행됐다. 그리고 그런 만행을 부추긴 것은 9·11 이후 부시 정부가 재소자들에게 전쟁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지 않기 위해 체계적으로 기울인 노력이다.

예컨대, 현 법무부 장관인 알베르토 곤살레스는 백악관 법률보좌관으로 재직중이던 2002년 초에 제네바 협약에 따른 권

리를 재소자들에게 보장하는 미군 병사들은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디타 학살이 몇몇 “썩은 사과” 때문이 아니었듯이, 관타나모나 아부 그라이브의 인권 유린과 만행도 부시 정부의 집요하고도 조직적인 노력의 결과다.

‘아부 그라이브의 원조’, ‘죽음의 수용소 군도’인 관타나모 수용소는 당장 폐쇄돼야 한다.

미국의 관타나모 점령사

쿠바에 미군 기지와 수용소가 존재하게 된 것은 제국주의의 유산이다.

1823년 먼로 독트린 발표 이후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 열강을 몰아내고 자국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애를 쓰던 미국은 1898년 아바나 항구에 정박중인 미 군함

의 폭발 사건을 빌미로 미국-스페인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 당시 미국 해군은 허리케인을 피할 수 있는 천혜의 항구인 관타나모 만을 이용해 스페인 군대를 공격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미국은 쿠바에 점령군으로 주둔하며 군정을 실시했다.

1901년 2월 쿠바 헌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독일의 카리브해 지역 진출 움직임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쿠바 내정 간섭권과 해군기지 차용권 등을 포함한 플랫폼조항을 쿠바 헌법에 부대조항으로 삽입시켜 쿠바를 사실상의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1902년 쿠바는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미국은 1903년 2월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한 쿠바의 첫 대통령 토마스 에스트라다 팔마와 관타나모 만 영구임대 조약을 체결했다.

1959년 쿠바 혁명 후 피델 카스트로 정부는 관타나모 기지 반환을 미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동의해야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부당한 조건을 들이대며 미국은 이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

이수현

반자본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포럼이자 축제

2006 “전쟁과 혁명의 시대”

기간 : 7월 14일(금) ~ 7월 17일(월) 장소 : 고려대학교 주최 : 다함께
참가신청 : 전화 02-2271-2395 인터넷 신청 www.marxism.or.kr

60여 명의 연사와 60개의 강연

박노자(《당신들의 대한민국》저자), **김종철**(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크리스 나인햄**(유럽사회포럼/세계사회포럼 조직자), **박인규**(《프레시안》대표),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 한미FTA저지 특위위원장), **최일봉**(‘다함께’ 운영위원, 주간《맞불》편집자),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성수의원 원장), **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김선동**(민주노동당 사무총장)